

##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50호

### 위기의 늪에 빠진 한반도, 진단과 모색

#### 기획 취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2016년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은 교류나 소통보다는 서로 대립과 비판이 주가 되는 패러다임의 '분절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드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더 깊은 늪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합의는 2005년에 이룬 9.19 공동성명입니다. 9.19 공동성명 합의 11주년을 보내는 시점이지만 이 역사적 합의는 점점 빛을 바래가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동서독과 같이 통일을 이루어서 유럽통합을 선도하는 모델이 아닌 갈등과 대결이 일상화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델로 향해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모색은 안보상업주의에 밀려 설자리가 점점 좁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리아연구원에서는 위기의 늪에 빠진 한반도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습니다.

- [1] 사드는 미국의 '달려 패권'을 지켜준다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9/12)
- [2] 2016년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주장환, 한신대> (9/12)
- [3] 핵분단체제 하의 좁은 문: 5차 북핵 실험 이후 한국의 선택 <서보혁, 코리아연구원·서울대> (9/12)
- [4] 북미 대립관계 해법과 9.19 공동선언의 가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9/20)

※코리아연구원(이사장: 박영재 / 원장: 김창수)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 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CMS자동이체

사무처로 전화(02-733-3348)주시면 이메일로 CMS자동이체 회원약정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송금

우리은행 1005-100-937962(예금주: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 사드는 미국의 ‘달러 패권’ 을 지켜준다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 I.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사드
- II.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구조적 힘
- III. 사드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 I.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사드

과학 철학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동일한 사물도 관찰자의 이론(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사드라는 동일한 대상 역시도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사드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관점의 '우열'은 가리기 어렵다. 관점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간의 '층위'는 분명 존재한다.

첫째, 수면 위에 드러나 보이는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수단이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정부와 주류 언론, 또 대중들의 관점이다. 사실, 북핵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한의 핵무장일 것이다. 기술적으로 핵에 대한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남한 핵무장을 찬성할 리 없다. 핵을 가지는 한국이나 또 그로 인해 핵무장으로 나아갈 일본이 미국의 안보 울타리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왜 그렇게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반대했겠는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드라는 요격 미사일 배치뿐이다. 미국도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족속들이다. 북한을 두둔하는 중북 세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허점투성이다.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조차 그 요격 성능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예정대로 사드가 배치될 경우 사드는 수도권 방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수도권 방어에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면 도대체 왜 사드를 배치

하는가?

그뿐이 아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그 반작용으로 북-중 동맹이 강화돼 북한의 대남 위협이 더욱 배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벌써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의 공조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게 축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은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를 '확정' 짓게 만들려는 처절한 노력일 수도 있다.

둘째, 이제 수면 밑으로 내려가 보자. 수면 위에서 보이지 않던 미-중 간의 세력 경쟁이라는 보다 커다란 빙산 덩어리가 보인다. 북한의 위협은 명분일 뿐이다. 미국은 사드를 통해 있을지 모를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 중국의 미사일 운용에 관한 일거수일투족을 중국 코앞인 한반도에서 사드 레이더로 파악한다. 전략적으로 큰 이득일 수밖에 없다. 사드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선제 핵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중국의 반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요격 미사일 체제는 강대국 간 '상호 확증 파괴' 논리를 훼손해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사드 배치는 한국에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 풀섀를 지고 미-중 경쟁 구도라는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의 아귀다툼에 끼어 온갖 고초를 당했던 한반도 역사를 스스로 재현하려는 것이다. 400년 전 광해군이 그렇게 회피하고자 했던, 그러나 집단 사고에 빠진 인조 정권이 기어이 초래했던 그 어처구니없는 전철을 되밟고 있는 것이다.

셋째, 좀 더 수면 깊숙이 내려가 보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담합'이라는 또 다른 그림이 보인다. 미국은 공멸이 뻔한 중국과의 전쟁을 할 의사가 없으며, 단지 사드를 이용해 한국이라는 집토끼를 관리하려 한다는 관점이다.

자본주의 최후 단계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란 레닌의 예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에 올인 할 것이란 생각은 맞았으나, 자본주의 국가 간에 제국주의 전쟁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예언은 들어맞지 않았다. 레닌은 핵무기라는 궁극의 무기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 수단이 없다는 사실은 핵무기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강대국들 간의 '영구 평화'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대국들은 안보보다는 경제 이익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

물론, 그렇다고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안보는 이제 경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19세기 식으로 으박지르는 함포 외교가 아니라 보다 세련된 형태의 안보-경제 연계 전략이다. 1971년 금-달러 태환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미국이 여전히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 II.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구조적 힘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에는 정치경제학자 수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가 말한 미국의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이 존재한다. 그 구조적 힘은 생산, 안보, 금융, 지식 영역에서 미국이 복합적으로 발휘하는 힘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들 각 영역에서 단순히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를 타국에게 제공한다. 돛자리를 깔아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국의 구조적 힘을 반복적으로 타국에 확산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빠진 호랑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타국은 더 이상 달러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패권은 결국 산산조각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은 안보를 '소환'한다. 안보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압도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국도 안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을 신뢰한다. 영화 <인디펜던스데이>처럼 외계인이 침공해도 미국이 지켜줄 것 같은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독점하는 결제 수단(달러)을 믿고 구매한다.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등장이다.

2011년 오마바 정권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선언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 "아시아로의 회귀는 미국의 안보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국무장관 시절 힐러리의 주장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 역시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구성국이다. 물론,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 처럼 미국의 안보에 신세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저항할 여력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저항은 그리 합리적이지 못하다. 중국이 저항할수록 중국은 미국의 인정 투쟁 부조리극의 충실한 악역 역할을 해주는 꼴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비판 이외에 그저 '일대일로' 구상 등을 통해 자신의 활동 반경을 묵묵히 넓혀나갈 뿐이다.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믿음과 함께.

### III. 사드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드는 북핵 대응용도, 또 미-중 경쟁의 산물도 아니다. 사드는 미국이 경제 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가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한가? 사드에 관한 각각의 관점은 모두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역시 관점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드가 '북핵 대비용'이라는 관점만이 선전되고 강요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류 정치권력이, 주류 언론이, 그리고 지식 권력이 그러한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또 강요한다. 대중들은 그들에 의해 충순한 사드 지지자들로 '주체화'된다. 관점의 폭력일 수밖에 없다. 그 저의에 정치적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

"진정한 해방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하다." 철학자 미셸 푸코의 단언이다. 왜 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권력의 생각인가? 사드가 우리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가? 왜 청년들이 절망해야 하며, 왜 서민들 호주머니가 털려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 아닐까? (2016/09/12)

☆ 위 글은 '사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켜준다' (프레스리안, 2016년 9월 8일)에 실린 글입니다.

## 2016년 9월 15일 한중 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주장환  
(한신대 중국학과)

- I. 들어가며
- II. 한계: 패러다임의 분절화
- III. 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
-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9월 5일 한중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양국의 관계가 매우 안 좋다는 일반적인 평가 속에서 열렸다. 불투명하던 양국 정상 회담이 G20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결정되는 바람에 양국 간에 뭔가 획기적인 의견 조율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워낙 그동안 확인된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에, 기대보다는 내년 중국식 정권 교체 즉 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한창 물밑 작업 중인 관계 때문이지, 여태껏 최고 지도부 단위에서의 반응이 없었던 까닭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어떤 톤과 표현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할지에 세간의 귀추가 쏠렸다.

결과는 예상대로(?) 토마스 쿤이 말한 서로의 관점과 시각에 대한 교류나 소통이라기보다는 강변하는 패러다임의 ‘분절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양국이 이번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II. 한계: 패러다임의 분절화

전반적인 평가로는 이른바 패러다임의 분절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김신 장군의 ‘음수사원(飲水思源), 한중우의(韓中友誼)’의 예를 들며 중한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관련 논의의 전개를 희망했다. 시각에 따라서, 특히 ‘음수사원’의 뜻은 현재의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반영하듯 매우 감정적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서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 톤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 중국의 한중관계의 인연과 중요성에 대한 상기에 동의를 표시하고, 양국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의 전개를 기대했다. 모두 발언만 보면, 양국 모두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회담의 결과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단지 중국 측 지역 갈등 증폭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분명한 사드 반대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유지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한국은 북한 핵 위협 억제를 위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 주장 등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기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외의 견해는 현상적으로 사드 배치의 이유, 효용성과 부작용 등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 의견들은 모두 북한 및 한반도 문제, 미중 패권 경쟁 등과 같은 연관된 문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가히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패러다임 급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토마스 쿤이 지식의 절대성 보다는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출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여러 패러다임간의 경쟁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시각과 견해와의 소통과 교류를 진행하기 보다는 대립과 비판이 주가 되는 패러다임의 분절화가 현실적으로 만연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실 이런 현상의 조짐은 직전에 열린 한러, 중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나타났기에 그리 큰 이변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 측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용으로 보이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은 역시 그 설득은 물론이거니와 주목을 끄는 데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 각자 서로의 패러다임만을 강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Ⅲ. 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

그러나 굳이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협의론’은 중국으로부터 일정한 주목을 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주목한 것은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된 사드 배치 문제의 본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다. 즉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제적 갈등의 본질은 미중간 경쟁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3자가 모여서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은 그 현실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관되게

한국 내 사드 배치가 미국의 대 중국 견제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드 배치 발표 초기만 해도 한국의 자주권의 문제라고 못 박은 입장에서 한 발짝 양보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기에 중국에 대해 일정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기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그 결과가 세력 재편일지 아니면 세력 전이일지는 아직 결론 내리기 힘들다, 양국 간에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잠재적 패권 도전국에 대해 다양한 측면과 수준에서의 견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그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언급되었듯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 이 정책은 미국의 인정 여부와 관련 없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대 중국 포위 전략임에 분명하다. 이 지역에서의 기존의 분쟁 잠재 지역 즉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등에서의 분쟁에 미국이 적극 개입하면서 중국을 매우 강한 수준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편 현재 명물허전의 패권국인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중국은 전면 대응하기보다 우회 전략을 펼치고 있다. 물론 대내적으로는 시진핑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중국의 꿈’ 담화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밝히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외교 정책의 차원에서 이와는 달리 적극적이지만은 않은 전략으로의 수정을 진행했다. 개혁·개방 시기의 대외 전략의 핵심이던 태평양과 동북아시아 중심의 동진 전략을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서진 전략으로 변경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상 미국과의 마찰을 부담스러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012년경부터 본격화된 이 전략은 현재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전략 변경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집요하게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일대일로 중 일로 즉 해상실크로드 구축 계획은 남중국해 분쟁과 이로 인한 동남아 국가들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인해 거의 진척이 없다. 대신 러시아의 영향권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대 사업에서만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자칫하면 내정간섭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실제 위협의 정도와 무관하게, 한층 더 자신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대응을 살펴보면 중국의 이러한 불안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7월초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중국이 우선 취한 조치는 국내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7월 24일 CCTV 뉴스를 통해 자국이 2010년 1월과 2013년 5월 그리고 2014년 7월에 중간 단계 요격 실험

에 성공했고, 이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미사일 방어 기술을 보유한 것이라고 다소 시기에 맞지 않는 사실을 보도했다. 자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중국 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한 시진핑은 7월 27일 육군 기관을 시찰한 자리에서, 항일전쟁 시기 적의 교통망이나 통신 시설, 기계 설비, 거점 등을 파괴하는 전투를 가리키는 ‘포습(破襲)전’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필요시 사드 배치 지점에 대한 직접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동풍(東風) 계열 미사일의 기동성 강화와 공대지 미사일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의 이렇게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시 외에도, 구체적인 대국민 안심 메시지 전달과 군사적 대응 준비에 나설 정도로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 내 사드 배치의 본질 즉 미중 패권 경쟁 구도 하에서의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3자 협의론은 중국의 초기 반응의 냉담함과는 달리 관심 끌기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냉담함의 원인은 한국의 제안에 있다기보다 미국이 받아들일지 등 현실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나가며

하나의 패러다임이 중세 시대 천동설과 같이 ‘도그마(dogma)’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오류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의 수단으로 선택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 및 국제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쏟은 시기에 북한은 제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금 시기에 현재 받아들인 패러다임의 오류 가능성에 착목해야 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의 본질을 적절하게 파악한 만큼 기왕 제안한 한·미·중 3자 협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실제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돌입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패러다임은 달라도 문제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2016/09/12)

## 핵분단체제 하의 좁은 문: 5차 북핵 실험 이후 한국의 선택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I. 5차 핵실험이라는 무거운 의미
- II. 핵분단체제의 형성과 지속가능성
- III. 좁은 문과 넓은 문
- IV. 한국의 선택지

북한은 9월 9일 오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실험 약 4시간 후에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관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이번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하였다”며 핵실험이 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 I. 5차 핵실험의 무거운 의미

9일자 위 방송과 〈로동신문〉 사설을 묶어볼 때 김정은 정권 들어 노동당의 국가 지도력은 정치사상과 제도 양 측면에서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중앙TV는 핵실험이 노동당의 지도 하에 이루어졌고, 〈로동신문〉은 “김정은 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에 즈음한 2012년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 하면서 관련 법제를 통해 핵 보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경제핵병진노선을 통해 핵무력 강화와 핵기술의 민수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해왔다.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5차 핵실험은 지진 5.0~5.3, 위력 20~25Kt으로 분석되고 이번 실험이 지표면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려져, 다섯 차례 핵실험 중 가장 파괴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지난 6월 발사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을 비롯해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량해온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무장력은 핵개발 및 보유 능력을 넘어 핵미사일로 발전해 실전 이

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언론은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가지 분열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이용 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핵실험은 미 본토를 타격할 대륙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능력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와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지역의 미군기지를 핵공격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5차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이 최대의 효과를 의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화국 창건 68주년’에 맞춰 최대 위력의 핵실험을 성공한 점은, 김정은 정권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비전을 가시화 하고 경제혁명진노선의 성과를 과시해, 결국 “유일영도” 수령의 지도 아래 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를 증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공화국 창건 68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박봉주 총리는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5차 핵실험은 한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심각한 파열구를 내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고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대북 제재외교를 일단락하고 귀국하는 일정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북한이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 중 대북정책이 뚜렷한 대안 없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는 주장으로 연결지를 공산이 크다.

북한은 또 한미일 대북 제재 공조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명분으로 핵무장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체제 결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실험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의 인정 획득을 목표로 삼아 워싱턴에 전쟁과 협상 중 하나의 선택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은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 중국이 관여하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관련국들간 협력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핵무장력 강화의 길을 갈 것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정권은 핵 비확산과 지역안정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과 중국이 여러 세계 및 지역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미국이 권력교체기

를 맞이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 핵무장력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 협상의 지렛대 극대화 등과 같은 외교안보전략상의 효과도 확보해두려 했다. 이런 다각적인 편익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중국과 지속되는 냉각은 감수할 만한 비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예견되었다. 그렇지만 9월 9일 단행된 5차 핵실험은 북한의 대내외 상황, 그 시점과 위력 등을 종합 감안할 때 김정일 정권에 다각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고, 관련국들은 허를 찔린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의 5차 핵실험이 “통제불능”의 김정은 때문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더 합리적일 것이다.

## II. 핵분단체제의 형성과 지속가능성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장과 그에 대한 한미일 주도의 지속적인 국제 제재는 장군명군식의 행동(Tit-for-tat) 패턴을 보이며, 세계에 한반도를 장기분쟁지역으로 새삼 각인시켜주고 있다. 전쟁까지 치른 적대세력들이 각기 ‘힘을 통한 평화’ 노선에 따라 서로 경쟁하는 식으로 자신의 존립과 행동을 정당화 해왔다. 그렇게 형성 지속되고 있는 분단체제는 이제 남북 양쪽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핵분단체제의 출현이다.

핵분단체제는 1)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의 안보 불안을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일차 배경으로, 2) 2000년대 2차 북핵 위기를 6자회담을 이용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차 배경으로, 3) 김정은 정권 들어 계속된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을 분기점으로 해 형성되어 갔고, 4) 이후 북한은 그런 상태를 기정사실화 하는 군사 도발과 외교를 전개해 왔고, 5) 한미일 주도의 대북 제재와 북한급변사태 대비가 핵분단체제 형성을 촉진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자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맹비난했고, 중국측은 “결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과 군중행사가 이어질 것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등 국제적으로 추가 제재 결정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할 수도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졌다. 북한은 추가 제재를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핵위기를 더 조성해나갈 것이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9일 발표한 성명 말미에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북한이 만약 조건이 맞아 대화에 나선다면, 최소한 대화를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는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거나, 최대한 핵군축 협상 개최를 주장하며 기존 핵능력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 Ⅲ.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러나 한미일 등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고 핵폐기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핵능력 강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물론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것도 북한의 핵능력을 약화시키고 비핵화 협상을 차단함은 마찬가지다. 다만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을 새로운 차원, 즉 핵군비경쟁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 다른 점이다.

한편, 야당 일각과 진보성향 언론에서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원인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서 찾으려는 움직임도 경계할 바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시기 발생했다. 대북 강경정책을 전개할 때 핵실험이 더 많았다고 강경정책을 제일 원인으로 삼는 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배경을 대내적,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고, 대외적 측면을 북한의 안보위협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제일 대상이 남한보다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위 핵무기연구소의 성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 이유를 밝힐 때도 대내외적 명분을 제시했는데, 대외적 명분은 일관되게 ‘미국의 계속되는 적대시 정책’이었다.

향후 한반도는 핵분단체제를 공고히 하는 핵군비경쟁의 길로 본격 진입하는 경우와 북한의 핵능력 동결과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핵협상으로 나서는 경우, 기본적으로 둘 중의 하나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앞의 길은 안보 포퓰리즘의 지지를 받는 넓은 문고, 뒤의 길은 망상 혹은 중복이라는 낙인을 받을 소지가 큰 갈 좁은 문이다. 물론 목하 서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앞의 길로 나

아갈 공산이 크다.

금번 북한의 핵실험 타이밍을 감안할 때 감정적이거나 관성적인 대응을 금물이다. 많은 지적처럼 비난보다는 분석, 무망한 압박보다는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상대의 의도와 우리의 대책을 준비할 이성과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강경, 압박 일변도의 접근은 상황 관리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상황관리를 통해 우리의 대책과 관련국들간 협력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북에게 추가 도발의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 상황관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미국, 중국 등과 협조해 북한과 비공개 접촉도 검토할 만하다. 대화를 보상이나 양보로 간주하고 주관적인 판단 하에 압박 모드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상황관리 노력과 함께 향후 대북정책, 비핵정책의 목표와 중간단계 설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북한이 핵보유 능력을 가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를 관련국들이 공식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관리 하에 일차적인 과제는 북한의 핵확산을 예방하는 일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 하고 그 기술과 물질을 외부로 확산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기본 과제다. 여기에 미국, 중국, 러시아가 공감대가 있기에 한국(과 미국)은 적절한 추가 제재와 상황관리 하에 (미국, 중국,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 IV. 한국의 선택지

사실 한반도 비핵화는 1994년 10월 이후 제네바합의 이행, 2005년 9월 9.19 합의 이후 등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국들, 특히 미국과 북한간 불신으로 좌초되었다. 21세기 들어 유일한 북한의 다섯 차례 핵실험과 한반도의 긴장을 고려할 때 기존의 비핵화 합의가 사문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그것이 비록 좁은 문이라도 해도 말이다.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라크, 리비아 침공과 같은 예에서 보듯이 미국의 계속되는 적대시 정책 하에서는 핵무장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북한은 경제지원, 관계정상화를 건어차고 미국에 핵군축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미국의 ‘선의의 무시정책’ 하에서 그것은 북한의 핵무장 명분과 시간벌기에 이용되었다.

이제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갔다. 오바마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은 적어도 1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미국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사이 한국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의 입장에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폐기나 핵무장을 선언하면 미국과의 갈등은 물론 북한의 핵무장 덩에 빠져드는 딜레마에 들어간다. 미국으로부터 전술핵무기 도입도 마찬가지다.

북의 핵동결을 현실적인 과제로 잡고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해 비핵화의 길을 다시 닦아야 한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 중국이 지지, 보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 외에 대안이 없다. 북핵문제의 역사적 연원과 현실적 심각성,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이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자는 말을 실천할 때다.

박근혜 정부가 그 일에 나설 때다.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국민의 선택이다. 한국과 민족과 지역의 미래를 깊고 충분히 논의하는 기회를 차기 지도자와 정부를 결정하는 시간에 가져야 한다. 토의와 숙의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는 안보문제에도 적용될 때 그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이성이 마비되었던 선거 시기를 앞둔 이때 문민통제의 헌법 원리에 입각해 안보와 평화 문제를 이성적으로 논의할 장을 각계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2016/09/12)

## 북미 대립관계 해법과 9.19 공동선언의 가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 I. 노동당 창건일 퍼레이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장 가능성
- II. 북한과 미국의 응수타진
- III. 안보 상업주의와 비핵평화가의 길

### I. 노동당 창건일 퍼레이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장 가능성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합의는 2005년에 이룬 9.19 공동성명이다. 9.19 공동성명 합의 11주년을 보내는 시점이지만 이 역사적 합의는 점점 빛을 바래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9월에만 이동식 발사대에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고, 가장 큰 규모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9.19 선언 11주년 다음날인 20일에는 장거리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는 고출력 신형엔진 성능을 시험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준비를 예고하는 듯하다. 북한은 올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성공했다. 이후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발사실험도 성공하였다.

북한의 남은 행보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자신들의 개량된 능력을 공개해나갈 것이다. 90년대 북한의 핵협상을 서방세계에서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평한 바 있다. 살라미라는 이탈리아 소시지를 잘게 썰어먹는 것에서 연유된 말이다. ‘살라미 전술’라고 표현하든, ‘양과 껌질 벗기기’라고 표현하든, ‘도미노 현상’이라고 표현하든 공통적인 것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과 현상을 뜻하는 것은 유사하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 과정을 하나 하나 공개하면서 위협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수순은 이번에 실험한 고출력 신형엔진에 9월 5일 성공했다고 하는 소형화된 탄두를 장착해서 공개하는 것이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행사에서 실시하는 군사퍼레이드가 공개효과를 극대화할 시기이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와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 수준이 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나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평양작전지대에서 미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대미적대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분석은 북한이 G20에 맞춰서 미사일을 쏘다거나, 사드배치에 경고하기 위해서 SLBM을 쏘다는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그 시점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쏘냐가 본질이 아니다. 북한이 매년 성능개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다. 본질을 놓치면 어느 사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마치 괴기영화에서 나오는 슈퍼울트라 괴물이나 영화 인디펜던스데이에 나오는 외계인이 되어버릴 것이다.

## II. 북한과 미국의 응수타진

북한의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하겠다는 말대포 수준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러의 반발 때문에 앞으로도 별다른 창의적 해법을 못찾고 이런 고답적인 대응이나 하고 말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북한의 위협을 중국 견제 구실을 삼는다는 미국의 전략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아태지역에서 MD체제를 완성하려는 미국 군산복합체에게는 북한의 위협이 무기생산을 향해 열린 기회의 창이다. MD는 무한궤도와 같다. 완성체는 없는 밀빠진 독이다. MD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구가 망할 때까지 끝없이 돈을 투자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미국 군산복합체와 이해관계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괴기한 자용동체인 셈이다.

북한은 지난 7월 6일에 정부성명을 통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외무성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고 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조건으로 밝힌 것은 △ 남한내 미국 핵무기 공개와 핵무기·기지 철폐, △ 핵 위협·불사용 △ 미군 철수 선포 등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결국 미군철수와 핵불사용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은 미국과 핵군축을 하겠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강압외교 (coercive diplomacy) 차원에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조치가 잇달아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면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에 몰두해왔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 11주년이 되는 9월 19일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회담에서 과거와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불가침,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동결, 도발적 행위 중단,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등을 전제로 내걸었다. 그간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전까지는 비핵화 협상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온 것에 비해서 미세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케리의 이같은 언급은 7월 6일 북한 성명에 대한 뒤늦은 간접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응수타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거리가 너무 멀다.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슈 부각이라는 ‘노이즈 마케팅’을 구사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판 키우기를 계속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 임기 마지막에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차기정부는 당선 직후인 인수위 시절부터 강화된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이다. 그것이 협상이 될지, 미국일부에서 거론되는 선제공격이 될지는 아직은 안개 속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키운 판이 미국을 양자택일의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은 북한에게도 도박이 될 것이라 점이다. 한반도 문제의 출구가 이런 도박에서 찾아지는 것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신뢰구축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 Ⅲ. 안보 상업주의와 비핵평화국가의 길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은 지난 3국 외무장관 회담 이후 9.19 공동성명을 존중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구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북한에 대한 일전불퇴의 기세만 드높이고 있다. 제재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도 허장성세이다.

사실 9.19 공동성명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꾸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핵포기 약속을 이끌어낸 중요한 선언이다.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개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

9.19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존중하며 북미관계와 북미관계도 정상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시아 질서를 흔들고 있다. 9.19 공동성명은 이 같은 동북아 질서를 안정시키고 평화의 길을 열어서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는데 관련 국가들이 합의했다. 격동하는 동북아시아의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그 가치는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

9.19 공동선언은 이행되지 않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핵무장 주장은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게 된다. 선부른 핵무장 주장으로 국제사회는 한국도 핵을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핵무장 의심국가’로 만들 것이다. 안보상업주의의 결과이다.

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다.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란 미국에 의해 핵보유를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면 핵포기 압력을 받지 않고 실험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핵국가로서 핵무기확산방지체제를 주도하는 나라이다.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는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부여해버렸다. 인도는 협정에 의한 핵보유국지위 획득, 파키스탄은 묵인에 의한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스라엘은 핵보유 선언도 안했는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모태핵보유국 지위’에 올랐다.

여기에 ‘핵 문턱국가’(threshold nuclear state)가 있다. 일본과 브라질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를 억제(restrain)하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독일 같은 탈핵국가도 있다. 북한은 핵무기

를 보유하여 문턱을 이미 넘어섰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은 핵 문턱국가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여 핵무장도 못하면서 의심만 받는 '핵무장 의심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를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 어리석은 주장이다. 한국이 비핵 평화국가로서 국제적인 신뢰를 튼튼하게 만드는 힘이야말로 한국의 외교력과 국격을 높여서 북한의 핵포기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다.

9.19 공동성명에서 알 수 있듯이 꾸준한 대화와 협상이 최종적인 북핵포기를 매듭짓게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핵무장론이나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재는 북한의 핵능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9.19 공동성명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2016/09/20)

☆ "이 글은 한반도평화포럼에서 발행하는 '한반도의 아침'에도 함께 실립니다."